



세월호 참사 2년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2주기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3백4명의 목숨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의 진상과 책임은 국가 기관들의 비협조와 무시로 인해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

3월 28일부터 이틀간 열린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청문회가 끝난 후, 4·16연대는 "검찰과 감사원의 수사와 감사 과정에서 놓치거나 외면한 혐의점들과 문제점들이 다수 드러났다"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간을 보장하고, 특조위가 밝혀낸 여러 의혹을 수사하고 기소할 특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 2차 청문회에서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이 초점이 됐다. 그런데 1차 청문회에 이어 2차 청문회도 국회가 아닌 서울시청에서 열렸고, 지상과 생중계도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의 진실 은폐 의지가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지난해 말 1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이주영, 전 해양경찰청장 김석균, 전 해경 123정장 김경일 등은 단체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듯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했다(실제로 청문회가 끝나고 모범 답안으로 보이는 문건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번엔 '모범 답변'이 없었는지 아니면 암기를 잘못했는지 증인들 답변이 대부분 갈려 저들의 뻔뻔스런 세

월호 지우기가 일부 드러났다.

2차 청문회에서 몇 가지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됐다.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인 강해성은 "대기하라"는 선내 방송이 청해진해운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증언했다. 조타수 조준기도 유사한 주장을 했다. 2014년 2월에 세월호의 조타기가 고장 났는데도 수리하지 않고 운항을 계속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재확인된 은폐 시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가 매우 밀접했다는 것도 좀 더 분명해졌다. 이것은 유가족들과 민변이 꼽은 의혹 중 하나였다.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은 세월호 인수 과정에서부터 매우 긴밀한 사이를 형성해 온 듯하다. 특조위 박종은 상임위원은 "청해진해운에서 운영하는 선박들의 운항관리규정을 보면 유일하게 세월호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정원에 보고를 하도록 했다"고 제기했다. 실제로 청해진해운 전 기획관리팀장 김재범은 사고 당시에 국정원 직원과 문자 메시지를 두 번 주고 받았고, 2분 넘게 통화했다.

정부의 진실 은폐 시도도 확인됐다. 제주 교통관제센터(VTS) 교신 기록과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 항적도가 편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수사하고 발표했던 것이다. 참사의 진상에 대해 성역 없이, 조사·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분명해진 셈이다.

해수부는 지난 2년간 세월호 인양, 인양 방식, 유실방지 대책 등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면서 온전한 적기 인양과 미수습자 수습에 난관을 초래했다.

해수부는 2014년 5월에 이미 TMC사(세월호 인양 자문을 담당한 영국회사)로부터 인양 기술 문제에 대해 검토 보고를 받아 놓고도 같은 해 11월부터 다시 5개월간 정부기술검토TF를 운영했고, 2015년 5월 이후에나 인양업체 선정에 나섰다.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던 정부는 인양에서도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이다. 황당하게도 해수부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은 인양 계약서조차 읽어보지 않았다고 한다.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 9명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자 침몰 원인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대법원도 침몰 원인 규명을 위해 선체 인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그런데 최근 해수부는 특조위에 일방적으로 세월호 절단 작업을 통보했다.

이번 청문회를 통해 유가족들의 요구가 얼마나 정당한지 또 한 번 드러났다. 밝혀야 할 진실들이 산적해있다는 것, 정

부와 관련 기구들이 그 진실을 어떻게든 은폐하려 한다는 것도 분명해졌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니다

부산 세월호추모문화제

일시 : 4월 9일(토) 오후 7시
장소 : 부산역 광장
주최 : 세월호 부산대책위원회

전국집중 범국민 추모문화제

일시 : 4월 16일(토) 오후 7시
장소 : 광화문 중앙광장
주최 : 4·16연대 / 4·16가족협의회

[사전행사]

4·16 세월호 참사 2주기 전국 대학생 대회(가)
일시 : 4월 16일(토) 3시
장소 : 마로니에 공원

곧건히 “진실 규명”을 외치고 있는 유가족들

박근혜 정부는 올해 6월 30일에 특조위를 문 닫게 할 계획이다. 특조위에 예산이 편성돼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 게 사실상 지난해 9월이지만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월 1일이 활동 개시일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특별법이 보장한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이다). 이미 올해 예산과 인력 편성도 정부의 계획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세월호가 인양되는 시점에 특조위는 존재하지 않게 된다.

2014년 정부와 새누리당은 독립된 진상 규명 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줄 수 없다며 유가족들에게 특검 수용을 압박해 놓고, 유가족들이 특검 실시를 요구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2월 특조위가 요구한 첫 특검은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사라진다. 기존 검찰 조사가 부실했다는 것이 청문회를 통해 다시금 확인된 만큼 유가족들의 특검 실시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은 유가족들의 오랜 요구이지만, 정부는 유가족들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해 채 인양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인양 시기를 저울질하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의 가슴은 문드러지고 있다. 미수습자들을 찾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는 온전히 인양되어야 한다.

정부의 공격에 맞서 4·16연대와 유



“잊지 않을게. 꼭 진실을 밝힐게.” 온갖 수모와 냉대에도 곳곳이 진실 규명을 외쳐 온 유가족들. 우리가 이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

가족들은 지난 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해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집요한 공격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진실 규명 요구는 짓밟으면서 슬픔에 휩싸인 유

가족들 앞에 배·보상금 이야기를 흘리는 등 유가족들을 모욕하고 냉대했다. 지난해 정부가 밀어붙인 ‘쓰레기 시행령’은 진실 은폐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가 자신의 정치적 아킬레스건이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해 왔다. 최근에도 교육부는 전교조가 발행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의 학교 수업 활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정부와 우파의 진실 덮기 공격 못지 않게 커다란 국민적 공분도 존재했다. 정부가 안전보다 이윤을 내세우고, 기업주들의 돈벌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준 것이 참사의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대중적 분노가 확대됐다. 그 분노는 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하다.

회답

지난 2년 동안 유가족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2년 전 우리 아이들이 당한 고통보다 크지 않다”며 진실 규명 운동의 구심이 돼 왔다. 소설가 박민규 씨는 이런 유가족들을 보며 “겨우 돈이나 들고 나오는 당신들의 머리로는 납득하기 힘들겠지만 어떤 힘으로도 덮을 수 없는 인간의 존엄이고 위대함”이라고 말했다.

2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은 서명 운동은 물론이고 전국 각지를 방문해 간담회와 강연회 등을 통해 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2주기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특별법 개정과 특검 실시를 위해 싸울 계획이다.

진실과 정의를 바라는 많은 대학생들이 유가족들의 호소에 화답해야 한다. 참사 2주기 콘서트와 추모문화제에 적극 참가해 “지겹다”는 역겨운 말이 거짓임을 보여 주자.

대학 캠퍼스에서 커지고 있는 진실 규명 목소리

“너에게 간절했을 삶, 헛되이 살지 않을게.” 올해 대학에 입학한 16학번 새내기들의 말이다. 2년 전 참사만 아니었다면 2백 50명 단원과 학생들도 새내기가 됐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세월호 참사 2주기는 대학생들에게 더욱 남다르다.

“세월호 세대”를 자처하는 많은 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을 건설하고 있다. 인하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신대, 한국외대, 고려대, 부산대, 전남대, 한림대 등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 또는 특조위원 초청 강연회, 영화 ‘나쁜 나라’ 공동체 상영회, 특별법 개정 요구 서명운동, 노란 리본 달기 운동, 릴레이 배너 게시, 학내 단체 공동성명 발표, 2주기 집회 참가단 꾸리기 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희생자 가족이 직접 대학을 찾아오는 간담회들이 매우 성공적으로 열리고 있다.

올해 3월에는 ‘4·16세월호 참사 2주기 대학생 준비위원회’(이하 2주기 대학



3월 31일 고려대에서 열린 '세월호 유가족 간담회'에는 1백여 명이 참가해 여전한 관심을 보여 줬다.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참가 대학생들의 모습.

생 준비위)가 구성되기도 했다. 2주기 대학생 준비위에는 학생회, 동아리, 소모임, 정당, 단체들 55곳이 모였다(4월 1일 현재). 4·16연대는 이 기구를 2주기 이후에도 발전시켜 4·16연대의 상시적 대학생 부문기구로 만들 계획이다.

2주기 대학생 준비위는 4월 9일과

16일에 사전 행사를 열고 대학생들의 참가를 호소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늘 대학생들의 지지와 응원으로부터 큰 힘을 얻는다고 말한다. 대학생들의 활발한 운동 참여와 뜨거운 관심은 진실 규명 운동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구입하고 정기구독 후원해 주세요

※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 '집중이슈 - 세월호 참사에서 더 다양한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wspaper.org

추천 소책자

4차 전면 개정증보판
세월호 참사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승주·김지윤·박한솔·양효영 지음
3,500원, 138쪽

구입 문의 : 02-2271-2395, 010-5443-2395
mail@workersolidarity.org